

# Web 3 시대의 생존"법"

2025. 7.

권오훈 변호사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 발표자 소개



## 권오훈 (변호사, 법학박사)

- 차안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부위원장

[ohkwon@chakwon.com](mailto:ohkwon@chakwon.com)

02-6245-9090

# 목차

1. Web 3과 법의 충돌
2. 글로벌 규제와 법인 설계 전략
3. Web 3 조직이 겪는 분쟁과 그 해결법
4. 투자와 M&A를 위한 법률 구조 설계

# 1. Web 3과 법의 충돌

강의 목표: Web3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DAO, DeFi, NFT 등 주요 영역의 법적 쟁점을 파악한다.

# Web 3의 등장

주제	핵심 내용
웹의 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Web1 (Read)</b>: 읽기만 가능한 정적 웹 (e.g., 야후 초기 화면)</li><li>• <b>Web2 (Read-Write)</b>: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플랫폼 웹 (e.g., 유튜브, 인스타그램)</li><li>• <b>Web3 (Read-Write-Own)</b>: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제어하는 가치의 웹</li></ul>
'소유(Own)'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플랫폼의 통제에서 벗어난 <b>데이터 주권</b>의 시작.</li><li>• 이는 중앙화된 법률 시스템과의 <b>근본적인 충돌</b>을 야기하는 지점.</li></ul>

# Web 3 vs 기존 법질서

Web3 핵심 가치	기존 법질서의 핵심 논점
탈중앙성 (Decentralization)	"누가 책임자인가?" (관할권, 법인격, 책임 소재의 문제)
투명성 & 불가역성	"기록은 영원한데, 피해 구제는 가능한가?" (잘못된 거래의 취소 불가 문제)
가명성 (Pseudonymity)	"당신은 누구인가?" (KYC/AML 등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와의 충돌)
자동실행 (Code is Law)	"코드의 오류나 해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와 법적 보호의 공백)

#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구분	법적 논점
DAO의 정체성	<b>법적으로 DAO는 무엇인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인격 없는 단체? (비법인사단)</li><li>• 동업 관계? (민법상 조합)</li></ul>
책임 소재	<b>DAO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지는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설립자? 핵심 개발자? 아니면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모든 참여자?</li><li>• 사례: 美 CFTC vs Ooki DAO (법원이 DAO 구성원 전체에 책임을 묻은 사건)</li></ul>
거버넌스	<b>토큰 투표는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결정인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 참여자를 보호할 방법은?</li></ul>

# DeFi (Decentralized Finance)

구분	법적 딜레마 및 핵심 질문
'Code is Law'의 한계	<p><b>"코드가 법이라면, 버그나 해킹은 누구의 책임인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발생 시, 투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li></ul>
법적 보호의 공백	<p><b>피해자는 어디에, 누구에게 구제를 요청해야 하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은행 착오송금과 달리 DeFi에는 중재하거나 보상해 줄 중앙 기관이 없음.</li></ul>
전통 금융과의 비교	<p><b>DeFi는 왜 위험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금자 보호, 소비자 보호 등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 금융의 안전장치가 부재.</li></ul>

# “디지털 자산”의 정체

주제	핵심 내용
분류의 중요성	<p>디지털 자산은 '자산'인가, '증권'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산: 재산권, 양도소득세 등 적용</li><li>• 증권: 자본시장법,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등 훨씬 강력한 규제 적용</li></ul>
증권성 판단 기준	<p>미국: <b>Howey Tes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금전을 투자하고</li><li>2. 공동 사업에 투자하며</li><li>3. 타인의 노력으로</li><li>4. 수익을 기대하는가?</li></ol>

# 자본시장법 vs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구분	자본시장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대상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등)	가상자산
관계	상호 배타적 관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먼저 심사하는 1차 법률의 지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디지털 자산을 규율하는 2차 법률의 지위
판단 기준	실질 우선의 원칙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권리의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	기술을 기반으로 포괄적 정의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구분	증권 (Security)	파생상품 (Derivative)
핵심 특징	투자 원금 내로 손실 한정	투자 원금 초과 손실 가능
주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증권 (채권)</li> <li>• 지분증권 (주식)</li> <li>• 수익증권 (펀드)</li> <li>• 투자계약증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li> <li>• 옵션</li> <li>• 스왑</li> </ul>
가상자산과의 연관성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때, 대부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됨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지?

# 가상자산의 정의

구분	내용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제외 조항	<b>다음 항목들은 가상자산이 아님</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게임머니</li><li>•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li><li>• CBDC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화폐)</li><li>• <b>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파생상품</b></li></ul>
시사점	이 '제외 조항' 때문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면 가상 자산이 될 수 없고, 가상자산이면 증권이 될 수 없는 <b>상호 배타적 관계</b> 가 형성됨.

# 투자계약증권 테스트

##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3가지 요건

### 1. 공동사업 (Common Enterprise)

- 투자자의 돈이 모여 특정 사업에 사용되고, 그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와 사업자가 함께 공유하는가?

### 2. 타인의 노력 (Efforts of Others)

- 투자 수익이 투자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발행사나 재단 등 '타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가?

### 3. 수익 기대 (Expectation of Profits)

- 투자자가 시세차익, 배당, 이자 등 '경제적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투자했는가?

**결론:**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 증권형 토큰

# 증권형 토큰의 특성

구분	증권형 토큰	비증권형 가상자산
적용 법률	자본시장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무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발행 규제	증권신고서 등 사전 공시 의무 (매우 엄격)	별도 발행 공시 의무 없음 (거래소 상장 심사)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강력한 처벌 (과징금, 형사처벌)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규제 (과징금, 형사처벌)
사업자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 인가 필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필요
규제 목적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초점	이용자 자산 보호와 최소한의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

# NFT의 법적 쟁점

주제	핵심 내용 및 질문
소유권의 대상	<p><b>NFT를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사는 것인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 파일 그 자체? 아니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소유 증명(토큰)?</li><li>• 일반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원작자에게 그대로 남음.</li></ul>
지식재산권(IP)	<p><b>NFT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NFT 프로젝트별로 라이선스 조건이 모두 다름.</li><li>• 사례: BAYC(상업적 이용 허용) vs CryptoPunks(비상업적 이용만 허용)</li></ul>
증권성 이슈	<p><b>NFT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팔면 어떻게 되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각 투자 NFT'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므로 증권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매우 높음.</li></ul>

## 2. 글로벌 규제 동향과 법인 설계 전략

강의 목표: 주요 국가의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법인 구조 설계 전략을 수립한다.

# 왜 Web 3 기업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가?

구분	내용
핵심 동기	<b>규제 차익 (Regulatory Arbitrage)</b> •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의 강도, 속도, 방향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찾는 전략적 행위
주요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b>명확성 추구:</b>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피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전</li><li>2. <b>토큰 발행(ICO/IEO) 용이성:</b> 증권성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거나, 토큰 발행을 위한 법적 장치(재단 등)가 잘 갖춰진 국가 선택</li><li>3. <b>특정 사업 인허가:</b> DeFi, 파생상품 등 국내에서 인허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위해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국가로 진출</li><li>4. <b>조세 혜택:</b>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이 없거나 낮은 국가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 최소화</li></ol>
결론	해외 법인 설립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b>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글로벌 전략</b> 으로 자리 잡음

법안명 (Bill Name)	핵심 내용	현황 및 시사점 (2025년 7월 23일 기준)
1.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	<p><b>[스태이블코인 법제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제용 스태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연방 규제 체계 마련.</li> <li>발행사에 대해 <b>달러 또는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1 비율로 예치</b>하도록 의무화.</li> <li>투명한 준비금 감사 및 공개 의무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상태: 법률 제정 완료</b></li> <li>- 2025년 6월 17일: 상원 통과 (68-30)</li> <li>-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308-122)</li> <li>- 2025년 7월 18일: 대통령 서명 완료</li> <li><b>시사점:</b> 미국 최초의 연방 단위 암호화폐 단독 법안. 이는 스태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완전히 편입</li> </ul>
2. 클래리티 법안 (CLARITY Act)	<p><b>[디지털 자산 기본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b>증권 (Security)</b>'과 '<b>상품(Commodity)</b>'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SEC와 CFTC 간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상태: 상원 논의 예정</b></li> <li>-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li> <li>- 향후 상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li> <li><b>시사점:</b> 하원 통과로 입법 동력은 확보했으나, 상원에서는 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SEC의 '<b>집행을 통한 규제</b>' 방식이 지속될지, 아니면 의회가 정한 새로운 규칙이 자리 잡을지가 결정될 것</li> </ul>
3. CBDC 반(反)감시 국가 방지 법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p><b>[CBDC 발행 제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연준(Fed)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화폐(소매용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금지.</li> <li>정부의 금융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상태: 상원 논의 예정</b></li> <li>-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li> <li>- 클래리티 법안과 함께 상원으로 이관되어 논의될 예정.</li> <li><b>시사점:</b> 행정부와 의회 모두 '소매용 CBDC' 발행에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입법 우선순위는 앞선 두 법안보다 낮음. 미국이 당분간 민간 스태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합니다.</li> </ul>

# 유럽연합 (EU)

구분	내용
규제 특징	<p><b>세계 최초의 포괄적·체계적 규제: MiCA 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b>업무 단위로 명확히 분류</b>하고 각각에 대한 <b>개별 라이선스</b>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 채택.</li> </ul>
핵심 내용	<p><b>[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분류 및 라이선스구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거래·중개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li> <li>가상자산과 법정통화(또는 다른 가상자산) 간의 교환</li> <li>고객을 대신한 주문의 집행 및 접수·전달</li> </ul> </li> <li><b>보관·관리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를 대신한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커스터디)</li> <li>가상자산 포트폴리오 관리</li> </ul> </li> <li><b>자문·발행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li> <li>가상자산의 인수 및 주선 (Placing)</li> </ul> </li> </ol>
주요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단일 패스포트 (Single Passpor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회원국에서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추가 인허가 없이 <b>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 동일한 사업 영위 가능.</b></li> </ul> </li> <li><b>스테이블코인(ART, EMT)에 대한 강력한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준거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에 대해 엄격한 자본 요건, 준비금 증명, 상환권 보장 의무 부과.</li> </ul> </li> <li><b>강력한 시장 질서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서(Whitepaper) 발간 의무화,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작 행위 금지.</li> </ul> </li> </ol>
시사점	<p>'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번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b>법적 확실성</b>을 바탕으로 유럽 단일 시장 전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p>

# 싱가포르 및 두바이

국가	싱가포르 (Singapore)	두바이 (Dubai, UAE)
규제 기관	싱가포르 통화청 (MAS)	가상자산 규제청 (VARA)
규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제서비스법(PSA)에 따라 매우 엄격한 라이선스 심사 진행.</li><li>•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 최초의 독립적인 가상자산 전담 규제 기관(VARA) 설립.</li><li>• 거래, 중개, 자문 등 7개 유형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며 기업 유치에 적극적.</li></ul>

# BVI 및 케이만 제도

국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케이만 제도 (Cayman Islands)
규제 특징	VASP 등록제 & 유연한 법인 제도	VASP 등록제 & 재단(Foundation) 활용
규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부터 VASP(가상자산사업자) 법 시행, 금융서비스위원회(FSC)에 등록 의무화.</li> <li>• 규제 수준은 높지 않으며, 사업자 분류에 따라 요건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MA(케이만제도 통화청) 감독 하에 VASP 등록 및 라이선스 제도 운영.</li> <li>• 토큰 발행 주체로 '재단(Foundation Company)' 설립이 용이하여 널리 활용됨.</li> </ul>
비고	ICO/토큰 발행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나 지주회사 설립에 주로 활용.	ICO 등록 의무 있음

# 특금법과 VASP 신고 제도 (1)

구분	내용
법률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핵심 내용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VASP의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거래업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를 중개 (e.g., 업비트, 빗썸 등 원화마켓 거래소)</li><li>2. 보관관리업자: 고객의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 (e.g., 커스터디 기업)</li><li>3.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을 위한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li></ol>
목적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 (산업 육성법이 아님)

## 특금법과 VASP 신고 제도 (2)

구분	내용
핵심 신고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함.</li> </ul> </li> <li><b>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함.</li> </ul> </li> <li><b>3. 대표 및 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금융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함.</li> </ul> </li> </ol>
VASP의 핵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확인 의무(KYC) 및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AML/CFT) 의무 이행</li> <li>•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보관</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L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b>이용자 자산 보호나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는 공백</b>이 존재.</li> <li>•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됨.</li> </ul>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 (1)

구분	내용
입법 배경	<p><b>'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법)의 한계 보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계 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했다면, 2단계 법은 <b>'발행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b>을 목표로 함.</li><li>• 여러 의원안 중, <b>민병덕 의원의 제정안</b>이 발행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음.</li></ul>
민병덕 위원안의 핵심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깜깜이' 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행 주체와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b>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b>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둠.</li></ul>
핵심 원칙: 설립/설치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내용:</b>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b>국내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재단</b>이어야만 함.</li><li>• <b>목적:</b> 발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b>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스캠 코인의 난립을 방지</b>하려는 취지.</li></ul>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 (2)

규제 영역	주요 내용 (민병덕 위원안 중심)
1.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백서 제출 의무화:</b> 가상자산 최초 발행 전에 금융위원회에 사업계획 등이 담긴 백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li> <li>• <b>중요사항 변경 시 공시:</b> 사업 계획 등 백서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백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함.</li> </ul>
2.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해상충 방지 의무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중개하는 행위 금지. (일명 '셀프 상장' 금지)</li> <li>-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li> </ul> </li> </ul>
3.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업권 세분화 및 규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VASP 외에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및 행위 규제 마련.</li> </ul> </li> </ul>
4. 이용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및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li> </ul> </li> </ul>

# 해외 진출을 위한 법인 구조 설계

구조	Double Layer (이중 구조)
개념	토큰을 발행하는 비영리 재단(Foundation)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법인(Op-Co)을 분리하여 설립하는 구조.
구조도	<p><b>Layer 1: Foundation (재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립지:</b> 스위스, 케이맨 제도, BVI 등</li> <li>• <b>역할:</b> 토큰 발행(TGE) 및 분배, 생태계 펀드 관리, 핵심 프로토콜 거버넌스</li> <li>• <b>특징:</b> 비영리, 세금 혜택, 규제 유연성</li> </ul> <p><b>Layer 2: Operating Company (운영 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립지:</b>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li> <li>• <b>역할:</b>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수익 사업 운영</li> <li>• <b>특징:</b> 영리, 개발팀 고용, IP 소유, 서비스 계약 주체</li> </ul>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리스크 분산:</b> 토큰의 증권성 리스크 및 규제 리스크를 재단에 집중시키고, 운영 법인을 보호.</li> <li>2. <b>명확한 역할 분담:</b> 탈중앙화된 거버넌스(재단)와 중앙화된 사업 운영(운영 법인)의 역할 분리.</li> <li>3. <b>세금 효율성:</b> 목적에 따라 각 국가의 세금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 가능.</li> </ol>

# 초기 법인 설계의 중요성

구분	내용
경로 의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초기의 잘못된 선택이 미래의 투자 유치, 세금, 규제 대응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음.</li></ul>
투자자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법인 구조는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li><li>• 법률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법인 구조와 지배구조는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핵심 사항.</li></ul>
핵심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b>사업 모델:</b>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li><li>2. <b>규제 환경:</b> 타겟 시장과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가?</li><li>3. <b>토큰의 역할:</b> 토큰은 단순 유틸리티인가, 아니면 수익 분배와 연관되어 있는가?</li><li>4. <b>미래 계획:</b> 향후 M&amp;A나 IPO 계획이 있는가?</li></ol>

### 3. Web 3 조직이 겪는 분쟁과 그 해결법

Web 3 조직에서 발생하는 주요 내부 분쟁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학습한다.

# 왜 Web3 조직은 분쟁에 더 취약한가?

구분	내용
1. 불명확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투자자, 팀원,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권리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함.</li></ul>
2. 극심한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초기 기여도와 보상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변하며 갈등을 유발.</li></ul>
3. 글로벌 원격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물리적 거리, 시차, 문화적 차이가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듦.</li></ul>
4. '탈중앙'의 이상과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명확한 리더십과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부재가 갈등을 방치하고 키우는 경향.</li></ul>

# 창업자 그룹 분쟁 유형

갈등 유형	상세 내용
지분/토큰 분배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중에 정하자"는 말이 모든 문제의 시작.</li><li>• 초기 아이디어 제공자, 초기 자본 투자자, 핵심 개발자 간의 기여도 산정 문제로 반드시 갈등 발생.</li></ul>
역할/권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 CEO, CTO 등 직책은 있으나 실제 역할과 권한(R&amp;R)이 불분명하여 주요 의사결정 시 충돌.</li></ul>
비전/전략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방향 전환(Pivot) 시, 기존 비전을 고수하려는 측과 변화를 추구하는 측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 발생.</li></ul>

# 창업자 그룹 분쟁 예방 - 주주간계약서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창업자들 간의 헌법'</b>: 회사의 운영, 주식, 분쟁 해결 등 동업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창업자 간의 사적 계약. 정관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함.</li></ul>
필수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주식양도제한</b>: 다른 주주의 동의 없는 주식(토큰) 매각 방지.</li><li>• <b>교착상태(Deadlock) 해결</b>: 분쟁 시 해결 방안(외부 중재, Shotgun 조항 등) 명시.</li><li>• <b>동반매도권(Tag-along)</b>: 대주주가 지분 매각 시,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권리.</li><li>• <b>창업자의 의무</b>: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 회사에 대한 의무 조항 포함.</li></ul>

# 창업자 그룹 분쟁 예방 - 베스팅(Vesting)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여에 대한 권리를 시간과 성과에 묶어두는 것." 창업자나 팀원이 약속된 기간 동안 기여를 해야만 주식이나 토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는 제도.</li></ul>
작동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베스팅 기간 (Vesting Period):</b> 권리가 완전히 주어지기까지의 총 기간 (e.g., 4년).</li><li>• <b>클리프 (Cliff):</b> 권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소 근무 기간 (e.g., 1년). 이 기간 내에 퇴사하면 단 하나의 토큰도 받을 수 없음.</li><li>• <b>(예시)</b> '1년 클리프, 4년 베스팅' 계약 → 1년을 채우면 25%의 권리가 생기고, 이후 3년간 매월 1/48씩 나머지 권리가 점진적으로 발생.</li></ul>

# 팀 내부 그룹 분쟁 유형

구분	내용
갈등의 핵심	<p><b>토큰 보상의 이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장밋빛 미래 (Upside):</b> 프로젝트 성공 시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강력한 동기 부여 수단.</li><li>• <b>젯빛 현실 (Downside):</b> 가격 폭락 시 가치가 사라지는 불안정한 보상이며,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씨앗이 됨.</li></ul>
주요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약속 불이행:</b> 구두로 약속한 토큰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li><li>• <b>임금성:</b> 지급된 토큰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단순 인센티브'인지에 대한 다툼. (임금일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li></ul>

# 팀 내부 그룹 분쟁 유형 - 명확한 보상 정책

구분	내용
고용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토큰 보상 명확화:</b>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별도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임을 명시하고, 지급 조건, 베스팅 스케줄, 가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li><li>• <b>IP 귀속:</b> 직무 중 발생한 모든 발명, 코드, 아이디어의 소유권(IP)은 회사에 귀속됨을 명확히 함.</li></ul>
보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투명성:</b> 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토큰 분배 기준 및 성과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공유.</li><li>• <b>일관성:</b> 특정인에게만 예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팀원들의 불만을 야기하므로, 일관된 정책 적용이 중요.</li></ul>

# 커뮤니티 분쟁

분쟁 특징	상세 내용
익명성과 집단 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거버넌스 포럼 등에서 익명에 기댄 인신공격, 선동이 발생하기 쉬우며, 논리보다 감성적인 여론에 의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음.</li></ul>
책임의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현상.</li></ul>
실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수 '고래' 투자자들의 담합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독점.</li><li>적대적 제안을 통해 재단의 자금을 특정인에게 이전시키려는 시도.</li></ul>

# 커뮤니티 분쟁 - DAO 거버넌스 설계

구분	내용
'DAO 헌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의사결정 프로세스 정의:</b> 제안(Proposal) 등록 조건, 최소 토론 기간, 투표 정족수(Quorum), 가결 요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문서화.</li><li>• <b>행동 강령 (Code of Conduct):</b> 커뮤니티 내 토론 규칙, 상호 존중 의무, 금지 행위를 정의하고 위반 시 제재(포럼 접근 제한 등)를 명시.</li></ul>
분쟁 해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단계별 해결 절차 마련:</b> 1차(내부 투표), 2차(중재 위원회), 3차(외부 중재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사전에 설계.</li><li>• <b>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b> 최종적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 미리 합의.</li></ul>

# 분쟁 해결의 단계

단계	주요 활동 및 특징
1단계: 협상	• 당사자 간 직접 대화. 감정은 배제하고, 계약서와 사실에 근거하여 해결 시도.
2단계: 내용증명	•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
3단계: 조정/중재	• 소송의 대안. '조정'은 제3자가 합의를 유도,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이 법원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짐.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함.
4.단계: 소송	• 최후의 수단. 가처분 신청으로 긴급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으나, 시간, 비용, 감정 소모가 가장 극심함.

# 최고의 전략은 “예방”

-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은 비싸다." 분쟁이 터진 후의 비용은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수백 배 더 큼
- '불편한 대화'를 초기에 하라: 지분, 역할, 보상, 해고 조건 등 민감한 주제일수록 창업 초기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함
- 모든 것을 문서화하라: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믿음 대신, 계약서와 정관이라는 문서화된 시스템을 믿어야 함

## 4. 투자와 M&A를 위한 법률 구조 설계

Web3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 및 M&A 관련 법률 구조를 이해하고, VC 관점의 법률 실사에 대비하는 전략을 학습한다.

# Web3 투자 유치의 두 가지 경로

구분	경로 1: 지분(Equity) 투자	경로 2: 토큰(Token) 투자
개념	전통적인 스타트업 투자 방식. 회사의 '소유권(주식)'을 판매.	Web3 고유의 투자 방식. 미래에 발행될 네트워크의 '가치(토큰)' 를 판매.
투자 대상	중앙화된 운영 법인(Operating Company)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또는 재단 (Foundation)
주요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AFE</b> (조건부지분인수계약)</li> <li>• <b>Convertible Note</b> (전환사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AFT</b>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li> </ul>

# SAFE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구분	내용
정의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미래의 지분을 약속하는 간단한 투자 계약" (Y Combinator가 보급)
핵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후속 투자 시 지분 전환:</b> 본 라운드(Series A 등) 투자 유치 시, 사전에 약속된 조건(Valuation Cap, Discount Rate)에 따라 투자금이 주식으로 전환됨.</li></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 구조가 단순하여 <b>빠르고, 법률 비용이 저렴함.</b></li><li>• 스타트업 친화적인 구조로 초기 단계(Seed, Pre-A)에서 널리 사용됨.</li></ul>

# 전환사채 (Convertible Note)

구분	내용
정의	"미래에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대출(채권) 계약"
핵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부채(Debt) 성격:</b> 만기일(Maturity Date)과 이자율(Interest Rate)이 명시되어 있음.</li><li>• <b>만기 시 상환 또는 전환:</b> 만기가 도래하면 회사는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지분으로 전환시켜 줘야 할 의무 발생.</li></ul>
SAFE와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투자자에게 만기 시 '<b>원금+이자</b>'를 회수할 권리가 있어, SAFE보다 투자자 보호 기능이 더 강함.</li><li>•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 압박이 존재하여 부담이 될 수 있음.</li></ul>

# SAFT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구분	내용
정의	<b>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b> "미래에 발행될 토큰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 (주로 법인격을 갖춘 재단이 발행 주체)
탄생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SEC의 증권 규제 회피 목적:</b> "개발 단계에서는 기능이 없어 증권(SAFT)에 해당하지만, 네트워크 런칭 후에는 실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므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논리 구조.</li></ul>
법적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SEC는 이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b></li><li>• SAFT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따라 발행된 토큰 모두를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li><li>• <b>사례:</b> Telegram, Kik 등 SAFT를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당함.</li></ul>

# 비교 분석

구분	SAFE	Convertible Note	SAFT
법적 성격	투자 계약 (미래 지분권)	채무 (대출)	투자 계약 (미래 토큰권)
전환 대상	주식 (Equity)	주식 (Equity)	토큰 (Tokens)
만기 / 이자	없음	있음	없음
주요 리스크	후속 투자 실패 시 지분 전환 불가	만기 도래 시 상환 압박	증권법 위반 리스크

## Web 3 M&A 특징과 유형

<b>전통 M&amp;A와의 차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수 대상이 주식, 자산 등 유형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b>온체인 자산, 커뮤니티 거버넌스, 멀티시그 지갑</b> 등 무형의 디지털 자산과 권리를 포함함.</li></ul>
<b>M&amp;A 주요 유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인재 인수 (Acqui-hiring)</b>: 핵심 개발팀 확보가 주된 목적.</li><li>• <b>기술/프로토콜 인수 (Tech/Protocol Acquisition)</b>: 특정 기술이나 프로토콜을 내재화.</li><li>• <b>커뮤니티/사용자 인수 (Community/User Acquisition)</b>: 특정 프로젝트의 사용자 기반과 네트워크 효과를 흡수.</li></ul>

# Web 3 M&A - IP와 스마트 컨트랙트 이전

구분	내용
지식재산권(IP)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코드 소유권:</b> 사용된 코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MIT 등) 범위를 확인하고, 회사가 소유한 독점적 코드의 소유권을 명확히 이전해야 함.</li><li>• <b>기타 IP:</b> 상표권, 도메인,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의 소유권 이전.</li></ul>
스마트 컨트랙트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기술적 문제:</b> 컨트랙트의 '소유권(Ownership)' 또는 '관리자 키 (Admin Key)'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전할 것인가? (Private Key 이전 절차)</li><li>• <b>법적 문제:</b> 수정 불가능(Immutable)한 컨트랙트의 경우,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통제권 이전이 불완전할 수 있는 문제.</li></ul>

# Web 3 M&A - 토큰과 트레저리 처리

구분	내용
피인수 프로젝트 토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토큰 스왑 (Token Swap):</b> 인수 회사의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li><li>• <b>바이백 후 소각 (Buyback &amp; Burn):</b> 시장에서 토큰을 매수하여 소각함으로써 가치를 보전.</li><li>• <b>유틸리티 유지/변경:</b> 기존 토큰의 유틸리티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유틸리티를 부여.</li></ul>
트레저리 (Treasury) 자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DAO 트레저리의 소유권:</b> 법적으로 트레저리는 누구의 것인가? (DAO 참여자 전체? 재단?)</li><li>• <b>거버넌스 승인:</b> M&amp;A 진행을 위해 DAO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투표를 통한 승인이 필요한가?</li><li>• <b>멀티시그(Multi-sig) 관리:</b> 트레저리 자금을 관리하는 멀티시그 지갑의 서명권자(signer)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li></ul>

# 법률 실사(Legal DD)란?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Due Diligence: 투자 또는 인수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 회사에 숨겨진 법률적 지뢰(Legal Landmines)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li></ul>
VC의 주요 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투자가 '깨끗하고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것.</li><li>• 투자 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시간과 돈을 낭비할 가능성은 없는가?</li><li>• 회사의 성장 발목을 잡을 치명적인 법적 하자는 없는가?</li></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투자 리스크 식별 및 최소화.</li><li>•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li><li>• 투자 계약서의 협상 포인트 발굴.</li></ul>

# 법률 실사 핵심 체크리스트 (1)

실사 항목	주요 확인 사항
1. 기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외 모든 법인의 등기부, 정관, 주주 명부의 정확성 및 일치 여부.</li><li>• 해외 재단(Foundation)과 운영 법인(Op-Co) 간의 계약 관계 및 적법성.</li></ul>
2. 창업자 및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든 주주가 서명한 <b>주주간계약서(SHA)</b> 존재 여부 및 내용 검토.</li><li>• 창업자 및 핵심 인력의 스톡옵션/토큰 베스팅 계약 조건 확인.</li></ul>
3. 핵심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요 파트너십, 기술 라이선스, 용역 계약 등 회사의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서 검토.</li><li>• 회사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없는지 확인.</li></ul>

## 법률 실사 핵심 체크리스트 (2)

실사 항목	주요 확인 사항
4. 지식재산권(I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핵심 기술/코드에 대한 <b>소유권 증명</b> (직무발명 계약서, 개발 용역 계약서 등).</li><li>•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 위반 여부.</li><li>• 상표권, 특허권 등 등록된 IP 현황.</li></ul>
5. 규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행된 토큰의 <b>증권성 리스크</b>에 대한 회사의 자체 분석 및 법률 의견서.</li><li>• <b>특금법상 VASP 신고 대상</b> 여부 및 이행 현황.</li><li>• <b>개인정보보호법</b>(국내법, GDPR 등) 준수 여부.</li></ul>

# 성공적인 Exit 준비 (1) - 가치 극대화

구분	내용
핵심 목표	"팔기 좋은 회사(Acquisition-Ready Company)" 만들기 인수자 입장에서 매력적이고, 동시에 법률적 '지뢰'가 없는 깨끗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
1. 법인 및 지배 구조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중 구조 명확화:</b> 해외 재단(Foundation)과 국내 운영법인(Op-Co)의 역할, 관계,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li> <li>• <b>주주/토큰홀더 관리:</b> 모든 창업자, 초기 투자자, 팀원과의 계약서(주주간계약서, SAFE, SAFT, 베스팅 계약 등)를 완비하고, 깔끔한 주주명부와 토큰 분배 현황을 유지.</li> <li>• <b>DAO 거버넌스 투명화:</b> 트레저리 관리 규칙,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인수자가 향후 운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li> </ul>
2. 핵심 자산의 법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권(IP)의 회사 귀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코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 개발자가 아닌 <b>법인에 있음을 증명</b> (직무발명 동의서, 개발 용역 계약서 등).</li> <li>-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위반 리스크 관리.</li> </ul> </li> <li>• <b>핵심 인력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와 핵심 개발자에 대한 <b>경업금지, 비밀유지 조항</b>을 포함한 명확한 고용계약 체결.</li> </ul> </li> </ul>

# 성공적인 Exit 준비 (2) - 법률 실사 대응

구분	내용
핵심 목표	"어떤 질문에든 막힘없이 증명할 수 있는 상태" 만들기 인수자(또는 투자자)의 모든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목표.
1. 가상 데이터 룸 (VDR)의 완벽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법률 실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하는 보안 클라우드 공간.</li> <li>• 준비 자세: "요청받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인수자가 요청할 모든 문서를 예상하고 카테고리별(법인, 주주, 계약, IP, 재무, 규제 등)로 완벽하게 정리. "투자를 무산시키는 것은 실사(DD)가 아니라, <b>엉성한 데이터 룸(Sloppy Data Room)</b>이다."</li> </ul>
2. 규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성 리스크 해명: "우리 토큰은 왜 증권이 아닌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친 의견서(Legal Memo)를 미리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방어.</li> <li>• 각종 규제 준수 증명: 특금법(VASP),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상의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증빙 자료를 준비.</li> <li>•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잠재적 리스크를 숨기기보다, "<b>우리는 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b>"고 솔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높임.</li> </ul>

감사합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